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

구리 50% 등 관세폭탄 ‘짜깁’… 산업계, 수출 경쟁력 비상

구리제품 전반 고율 관세 적용
배터리·전선업계 타격 불가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동박 제품.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구리를 대거 사용하는 배터리·전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은 구리 가격 상승이 완제품 가격에 본격 반영되진 않겠지만 관세 적용과 시세 추이에 따라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구리 제품 전반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제 구리는 물론 구리를 활용해 제조한 산업용 중간재와 반제품 등에도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지난해 구리제품 대미 수출액은 5억 7000만달러(약 7800억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배터리 및 전선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수출 규모만 놓고 보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국내 제조업 구조상 구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

려할 때 원가 상승 압박이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배터리업계는 북미 수출 비중이 높은 동박 등 핵심 소재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북미 지역의 하이엔드 동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제 7·8공장 증설에 나섰으며 스페인 신공장 착공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북미 완성차 업체와 고연신 동박 제품의 단독 테스트도 진행하는 등 현지 공략에 매진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비축 물량이 있어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관세 적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선업계 또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LS전선의 미국 전액 출자 자회사 LS그린링크는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약 11만 8000평 규모의 부지를 인수하고 약 1조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욱이 케이블과 전선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리 선물 가격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 구리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3.12% 폭등한 1톤당 1만 2526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증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이며 일일 상승률이 1969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리 관세가 앞서 시행된 철강 제품 관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의 상반기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고부가 전력 케이블은 글로벌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향후 미국 시장 확대를 고려하면 관세 부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여한구 “실질적 주고받기 통해 상호 호혜적 결과 창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 본부장, 시장 개방 불가피 시사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 할 수 없어”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시작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방미 결과와 관련 “7월8일로 예정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 유예시한을 넘기면서, 한미 간 협상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이제는 협상 랜딩존(합의지점)을 찾아 실질적인 ‘주고받기’로 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고받기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요청에 한국은 대미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할 유일한 국가”라며 “결국 한국이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수록,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줄어든 수밖에 없다. 미국 무역적자의 구조적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문제는 미국의 계산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무역적자 해소 효과를 중시하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즉각적인 수입 확대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특정 농산물 수입 확대는 정치적 파급력과 산업적 민감도가 큰 만큼, 협상에서 주요 난제로 꼽힌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그러나 당장 협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여 본부장은 “알래스카 LNG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결정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며 “지금 시점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정학 리스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의미는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은 어느나라도 고스톱지 않은 협상은 없다”며 “우리가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될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조절을 해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까지 패키지 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최상의 시나리오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남은 기간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

획이다. 그는 “국내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 트(권한)를 받는 과정은 미국과의 협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최대한 협의를 해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대미투자도 이번 관세협상에서 주요 우리측 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기업들도 오랜 기간 어떻게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업종별, 기업별 방안을 모색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앞서 나가지만,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나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양국 정부가 어떻게 기업 부분들을 서포트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상의 “韓 경제, 규제로 저상장 지속… 메가 샌드박스 도입해야”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 필요성 제기

한국 경제가 규제로 인해 지난 20년간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어 메가 샌드박스 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승현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낡은 저물고(지난 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가 가로막은 형국”이라며 “간판 기업들의 부진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인력·혁신도 지지부진하고,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선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을 먼저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수백 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규제, 노동 규제, 벤처투자 규제처럼 기업 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나

특구에서 나아가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선(先) 테스트하고 실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외 ▲AI 규제 지도로 소극 행정 완화 ▲규제 유지 당위성을 공무원이 입증 ▲범부처 규제 개선 ▲의원 입법 규제 영향 평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와 AI 샌드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김태년 국회의원(왼쪽 여섯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박스의 도입을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전 주기적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고, 민간 인증과 학계 평가를 연계한 체계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AI와 같은 첨단 신산업 규제를 설계할 때 단일 법률이 아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 유연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에 대한 실험실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기”라며 “규제혁신이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출생률 제고 등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